

2003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환경부

1.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1회용 용기의 사용 금지. 다만, 합성수지 제외의 재질이나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사용 가능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규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 조 별표2 (2003. 7. 1)

■ 정보통신

1. 유선→이동전화요금 인하

7월 1일부터 KT 가입자들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겨는 요금(LM요금)이 10초당 15.6원에서 14.8원으로 5.2%(잠정) 내린다. 요금 인하 분은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7월부터 연말까지 6분씩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2. 비동기 IMT-2000서비스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비동기식 IMT-2000(WCDMA) 상용서비스가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시작돼 2006년 6월에는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3.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실시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가 6월말부터 경기 안산·충북 청주·경남 김해·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경기 수원·성남·안양·고양 등의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전주 등에서 실시된다. 신청요금은 가정용이 회선 당 4천 원, 기업용은 회선 수에 관계없이 기업가입자당 4만 2천 원.

4. 휴대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복잡한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한 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가 개통돼 7월 1일부터 일반에 제공된다.

5. 유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보급

인터넷에서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7월 말쯤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보급된다.

6. 정보보호제품 표준적합성 시험서비스

정보보호제품(전자보안메일(S/MIME) 한)이 표준에 맞

게 만들어졌는지를 시험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12월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7.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5개 광역시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 관세청

1.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P/L(Paperless) 환급 확대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함

2. P/L환급 확대실시로 수출업체 비용 절감 지원

수출업체가 세관에 직접 나와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환급신청하는 소위 P/L(Paperless) 환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P/L환급대상 지정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함 즉, 종래에 P/L환급대상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P/L환급대상이 아닌 것만 지정함으로써 P/L환급대상을 전체 환급신청건수의 75~80%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함

3.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을 통한 수출업체의 편의 도모

국내업체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매번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에도 반입건별 또는 15일간 반입분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4. 환급절차 간소화를 적용한 부정·과다환급 방지

P/L환급 확대실시 등 환급절차 간소화를 이용한 부정·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환급업체평가시스템에 의해 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매년 2회 이상 평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P/L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 환급신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

5. 기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

- 해외 전시목적으로 무상수출한 물품이 전시중에 판매된 경우 관세환급을 하고 있는데, 관세환급시 해외 전시사실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급한 출품 확인서로만 확인하던 것을 업체에서 제출하는 출품사실 입증서류의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함

- 기업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책정하면서 단위실량을 과소하게 책정하거나 수량단위를 잘못 기재하여 과소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환급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전부에 대하여 일괄 환급신청해야 하는 업체의 환급상 불이익을 해소함

6. 의료비 간이영수증 소득공제 못받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영수증만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정한 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진료비 등 8가지로 간이영수증은 제외되어 있다.

재경부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받은 백지 간이영수증으로 진료비를 허위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가 많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운찬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시행시기는 7월 1일

로 그 이전에 병의원 등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은 연말 소득공제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와 관련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또 지방공무원 특수근무지역을 벽지수당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범죄신고 등으로 받은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기로 했다.

